

다산포럼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일본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에 주목한다

무방하다. 하지만 재정 검증은 단순히 연금 재정 전망이나 건전성 점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포함한 해당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에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 항목(경제 전제)에 대한 미래 값을 가정해야 한다. 이 다양한 전제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인구(출생률과 기대수명)와 경제(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에 관한 전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 제도를 당면 10년과 그 이후 90년 동안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신중하고 면밀하게 준비한다. 우선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 내에 경제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 전체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점검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경제 전체 중 운용수익률의 경우 재정 검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 당면 10년치는 구 경제기획청을 흡수·통합하여 신설된 내각부가 중심적으로 검토·논의하여 설정한다. 또한 재정 검증에서 운용수익률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전제 전문위원회가 기금 운용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자금운용위원회와 자주 의견을 교류하고 제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적 연금 적립금의 고갈과 재정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공적 연금 제도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비관적인 경제심을 자주 드러낸다.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은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더 나아가 여러 나라에서 재정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적 연금 제도 개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제도 개혁 논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공적 연금 재정 검증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와 달리 장기 재정 검증에서 재정 목표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즉 일본에서는 대체로 100년 정도 시계로 연금 재정의 균형을 추구하다가 당해 재정 검증의 최종 연도에 이르면 그때 지급해야 할 1년치 분의 연금 급여 총액을 적립금으로 보유(적립배율 1을 유

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경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2004년 연금 제도 개혁에서 보험료 인상의 최고 상한(후생연금보험료 18.3%)을 명시해 보험료의 추가적인 인상을 완전히 봉쇄해 놓았다. 셋째 연금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일정한 틀에 따라 수령 연금 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파탄과 적립금 고갈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이중 장기 재정 목표로부터 공적 연금 특유의 새로운 수익률 지표(실질적인 수익률=명목운용수익률-임금상승률)를 제시한다. 이 지표는 연금 재정의 호전·악화를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BM 대비 초과 수익률만 주로 따지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이 BM 대비 초과 수익률도 체크하지만 실질적인 운용 수익률의 목표치 1.7% 달성과 그것의 재정 검증상의 전제와 비교하기도 수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공적 연금의 적립금 운용이 그것의 장기 재정 목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고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고향의 향기

입어 광주에서도 취직이나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별 논외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만이 젊은 이들의 관심사였다.

이렇듯 낭만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고향의 향기를 기대하며 30년 만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으로 돌아왔다. 부임한 지 이제 3주, 부임 인사차 언론계, 학계, 유관기관의 기관장님 들을 비롯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났다. 아! 그런데 광주는 내 기억의 저편 고향의 향기와는 사뭇 변해 있었다. 만났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나누던 지역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현재보다 더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우울한 숫자가 가득했다. 전국 평균의 70%에 불과한 광주의 1인당 GRDP,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청년 경제 활동 참가율(40.1%),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 준비자의 비중(5.4%)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도 광역시 중 최저 수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중(37.0%), 가구당 평균 자산도 광역시 중 최하위, 재정 자립도(49.2%) 광역시 중 최하위...

이를 어찌할 것인가? 비장함까지 느껴졌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역 경제

에 대한 걱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순간 머릿속에서는 젊음의 낭만과 생동감이 넘쳤던 과거의 광주 모습은 하얗게 지워지고, 마크 파버, 스티브 로치, 루비니 교수 같은 월가의 대표적인 닥터들(경제 비판론자)들의 조롱만이 가득했다. '이 지경인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찌할 건데?', '고령화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2000년 60만 명→2016년 32만 명)하는 전남의 농가 인구를 보고도 희망을 꿈꾸나?',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광주 기아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이 50%인데 대책은 뭐지?',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았지만 아직도 생산 물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수주 부진으로 임금이 턱없이 부족한 조선 업체들은?'

그만! 알았으니 그만 비웃으라고! 도통 비판적인 리포트 밖에 쓸 줄 모르는 월가의 염세주의자들아! 광주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서브 프라임 위기에 맥없이 무너졌던 당신들 나라와는 다르다 우.

광주로 말할 것 같으면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정의로운 의향이며, 전국의 미식가들이 부러워하는 미향이며, 세계적인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고 국립 아

시아문화전당이 소재하는 예향 아니겠소? 11번 우승의 최강 기아타이어즈의 고향 광주가 이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일도 아니오.

에라 모르겠다. 일단 허풍으로라도 비판론자들을 물리치고는 피그말리온 효과나 노려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희망을 찾아보기로 했다.

웬걸!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광주·전남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나주 혁신도시 주변으로 에너지 밸리가 조성 중에 있고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태세다. 전국 2위의 귀농 인구를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 KTX 호남선 개통을 계기로 2200여 개의 섬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활용한 '관광 길'을 꿈꾸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한국의 퐁피두센터가 되려는 야심에 불타고...

그럼 그렇지! 부동산 호랑이의 기상은 살아 있었다. 민선 7기의 의욕적인 리더십과 사·도민들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다시 생겼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째인 올해를 계기로 내 기억 속 활기찼던 고향의 향기가 되살아나고 지역민의 자긍심이 회복되길 기원한다.

교단에서



김진우
우산중 교장

교복, 농아줄 때가 되었다

가 모처럼 제시간에 등교한 학생을 보면 이름을 부르며 반가운 손을 내밀기도 한다. 하지만 자각을 하는 학생은 거의 고장이다. 어쩌다 지각한 학생은 미안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단골 지각생은 세상 걱정 없이 그것도 휴대 폰을 보면서 느긋하게 걸어온다. 지청구를 하기 위해 교문에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인내가 필요한 지금의 학교 모습이다.

교문에 들어서는 학생들의 복장은 다양하다. 위아래 교복, 위아래 체육복(생활복), 교복과 체육복(생활복) 혼용, 완전 자유복으로 크게 4가지 유형이다. 자유롭다. 머리카락이나 화장도 교육적 지도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는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각 단위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하도록 되어있는 교복 규정이지만 옷감, 디자인, 색상 정도이다. 크거나 길이는 빠져 있기에 짧아지고 좁아진다. 크거나 길게 나오면 바로 수선을 하기에 이제는 교복 업체에서 아예 줄여 나온다. 여고생 교복 상의가 초등학교 5학년 아동복보다 8cm 더 짧다는 보도도 나왔다. 너무나 불편하고 보기에 민망하기까지 하다.

19세기 말 시작하여 100년 동안 입었는데 1983년 교복 자율화로 3년 정도 폐지되었다가 학부부 부담 증가, 위화감 조성 등으로 1986년 다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교복이 애물단지가 되어 후드티나 반바지 등 편안한 옷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교복 값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교복(동·하복)이 30만 원 내외, 체육복(생활복)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인데 몇 교육청에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 값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편안한 교복' 대신에 '편안한 폐지' 로 말이나.

학교의 상징도 아니고, 전통의 자긍심도 아니고, 구성원 동일체의 유니폼도 아닌 교복. 입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학교에 잘 다니 수 있는 교복. 그러나 '교복'이란 상징적 단어를 떼어내기가 부담스럽고, 80년대 교복 자율화에 따른 사복비 증가의 학습 효과 때문에 섣달 풀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지켜지지 않는 규칙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확산하기에 폐지하는 것이 더 좋다. 아주 짧고 작게 만들어져 바로 입어도 답답하고, 3년 입기에는 더 힘들다. 광주의 경우 몇 학교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 십 년 전통의 교복을 잘 입고 있고, 7개 중·고등학교는 교복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 입는 옷이 교복이다. 단위 학교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그렇다.

단단한 돌(제도)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 교복, 이제는 배움의 상징이고 학창 시절 추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시비의 대상이 되는 걸림돌이 되었다. 폐지해서 농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社說

광주 공기업, 시민 혈세로 제 식구들만 챙기나

광주시 산하 지방 공기업들이 매출과 당기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원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공기업도 있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가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 공기업들의 최근 5년간 인건비 비중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경영 악화에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나 초임 등을 대폭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1882억 원이던 매출이 2017년에는 797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 당기 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202억 원에서 163억 원으로 줄었다. 실적 저하에도 직원 평균 연봉은 5243만여 원에서 6339만여 원으로 5년간 1090만 원이 올랐다. 같은 기간 초임 연봉도 1574만 원에서 3072만 원으로 인상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13년 5061만여 원에서 2017년 6086만여 원으로, 임원은 8809만여 원에서 9798만여 원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전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난해 56.4%로 절반을 넘어섰다. 공사는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453억 원을 지원받았다. 혈세로 직원 임금을 올려 주고 있는 셈이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역시 임직원 수가 5년간 44명에서 117명으로 늘고 직원 평균 임금은 4461만여 원에서 5085만여 원으로 상승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악화하는 수익 구조와 상관없이 직원을 늘리고 임금을 높인다면 방만 경영이자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재정 행편이 열악한 광주시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책임 경영을 위한 조직 진단과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영업자 눈물 닦아 줄 후속 대책 시급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당장 폐업하고 월급쟁이 하고 싶다'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수입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어질 것이라 이들의 걱정이 닳두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일제히 집단 불복종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 업주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68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은 동종업계 근로자보다 열악한 생활을 한다는 통계도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논의를 보이콧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노사 자율 임금협약을 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한 것도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을과 을', '을과 병'의 '약자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을들의 전쟁'이란 말까지 나온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재정 지출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거론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해 봄, 충남 태안반도를 찾았다가 뜻밖에 삼별초(三別抄) 흔적과 마주했다. 안면도 중장리 병술만(兵坊壇) 주변에 석성(石城) 터 외에도 삼별초와 관련된 많은 지명들이 남아 있었다. 주민들은 '병술안'(군 아영지 및 훈련장)과 망대(초소), '둔두리'(군 지휘부 및 주둔지), '유형맞이'(삼별초가 왕으로 추대된 왕족 왕운을 처음으로 맞은 곳)와 같은 옛 지명들이 삼별초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삼별초는 고려 무신정권의 특수 군대로, 좌별초·우별초·신삼별초로 구성됐다. 1232년 여름,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고려 정부가

의 흔적을 대변한다. '새로운 고려'를 꿈꾸었던 삼별초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 나주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8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삼별초와 동아시아' 특별 전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연꽃무늬 수막새와 도깨비 얼굴 모양 토제품, 제주 향파두리성에서 나온 바둑판 등 다양한 유물이 눈길을 끈다. 또한 일본 에도 시대(1816년)에 그려진

'여원(麗元) 연합군의 일본 침공을 그린 그림'도 눈에 띈다. 이외에도 전시장 마

지막 코스인 '삼별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주제관이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계유장(1273년, 혹은 1393년)에 고려 기와장이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는 고려계 기와가 전시돼 있기 때문이다. 기와를 보면서 삼별초 일부 세력이 오키나와로 도피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영화 같은 상상의 나라를 떠 본다. 한여름 무더위 속, 삼별초 발자취를 따라 740여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은 피서법일 듯 싶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삼별초 시간여행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국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